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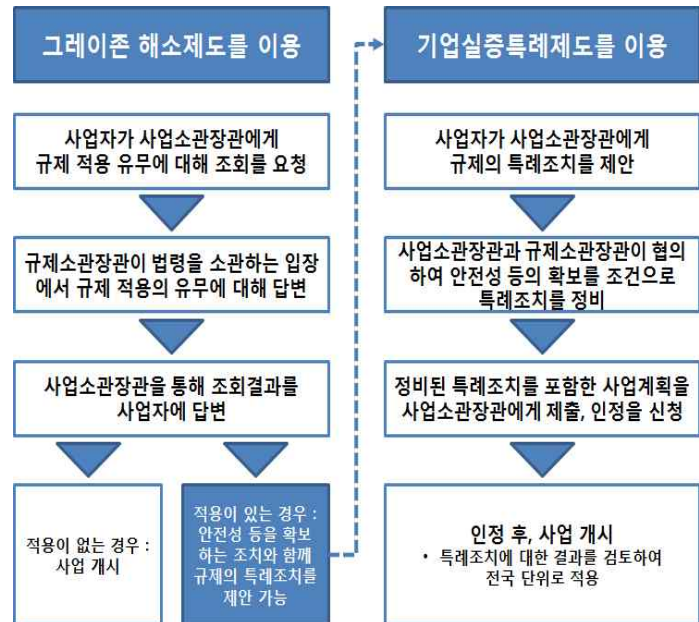
-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함께 2014년 1월 20일에 시행된 산업 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짐
- 전국 차원으로 개혁하기 어려운 규제를 기업 단위로 완화시켜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완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 제도 개요

-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 안전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
 - * 산업경쟁력강화법 관련 조항 : 제8, 10, 14, 15조
- 특례조치 인정절차는 아래와 같음
 - (1) 사업자가 규제의 특례조치를 제안
 - (2) 사업·규제소관 장관들이 협의하여 특례조치를 창설
 - (3)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인정을 통해 규제의 특례조치 이용을 인정
 - (4) 안전성이 증명된 특례조치에 대해 일반화·전국 단위로 전개
-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규제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등의 확보를 동시에 실현
- 일본정부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3층 구조에 의한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
 - 3층 구조는 「규제개혁회의의 검토를 통한 전국 차원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에 의한 지역 단위의 규제개혁」, 「기업실증특례제도에 의한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으로 구성

○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함께 구성되어 있음

- 그레이존 해소제도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그 활동에 관한 규제 적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건강 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트러블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음
- 사업 내용에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자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활용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응



□ 제도의 포인트

① 장점

- 사업소관 장관이 사업자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특히 경험이나 인재가 적은 중소기업에게 유익
- 전국 단위의 규제개혁 실현이 어려운 것이라도 우선 기업 단위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
- 같은 안전에서 같은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여러 기업이 있어도 같은 규제완화의 특례를 인정
-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던 사업자들이 감소함으로써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단점

- 여러 분야, 사업,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함
- 제도의 활용이 예상되는 사례가 너무 미시적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함
- 특례 인정 과정에서 인정 이유나 인정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등 정부의 관여가 공평하고 엄격한 것이어야 함

- 기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기업이 결과를 조회하고 선행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함
- 신청하고 답변이 발표되는데 한 달 걸리기 때문에 기업은 여유를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참고자료>

경제산업부 보도자료(2014.8.15)

[참고1] 제도 활용 사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각 안건의 개요

번호	건명	신청사업자	관계법령	개요	대응상황	비고
1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하는 가스 용기의 선진적 검사 방법 도입 (1월 27일 신청)	-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 - 가스 용기를 검사하는 기업 (3사업자)	고압가스보안법 (경제산업성)	초고순도 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외관 검사 및 내압 검사)에 대해 현행법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 등 검사 방법의 도입을 가능케 한다.	답변 끝 (2월 26일 공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관련 법령에서 특례조치를 강구한다(4월 하순 즈음 시행 예정).
2	새로운 타입의 수소탱크 도입에 의한 연료전지 포크리프트 실용화 (1월 27일 신청)	포크리프트 제조 기업	고압가스보안법 (경제산업성)	연료 용기로서 현행법령에서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 싸고 탑재 적성이 높은 전부 금속제의 수소 탱크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답변 끝 (2월 26일 공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관련 법령에서 특례조치를 강구한다(4월 하순 즈음 시행 예정).
3	물류에서 사용하는 어시스트력이 큰 전동 자전거의 공동주행 (1월 27일 신청)	- 전동 자전거 제조 기업 - 물류배송 기업	도로교통법 (경찰청)	물류 용도에서 현행법령의 기준보다 어시스트력이 큰(밝은 힘의 3배 보조력) 리어카가 달린 전동 자전거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답변 끝 (2월 26일 공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관련 법령에서 특례조치를 강구한다(4월 하순 즈음 시행 예정). ※ 본건의 사업수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과의 공동관리.
4	눈사태 피해를 방지하는 스키용 에어백 보급 확대 (3월 28일 신청)	아웃도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기업	화약류단속법 (경제산업성)	눈사태 피해를 방지하는 스키용 에어백에 대해 화약류단속법의 규제 적용 제외로 하고 현행법령 하에서 필요한 사업자(수입, 판매 등), 소비자(구입, 사용)의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답변 끝 (4월 25일 공표)	스키용 에어백을 화약류단속법의 규제 적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화공품을 지정하는 고시」의 개정이 실시됐다.
5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확대 (6월 26일 신청)	상공회의소	자금결제법 (금융청)	프리미엄 상품권의 발행 시 공탁금이 필요한 유효기간을 현행의 6개월에서 연장하는 특례를 설정하는 것을 신청.	검토 중	

[참고2] 3층 구조에 의한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